

교육초점

‘교사증 유효기간제’ 통제도구화 우려

교육부 추진계획 교원단체 “악용 소지 크다” 반발
월반·속진제도 “과외열풍 등 부작용” 학부모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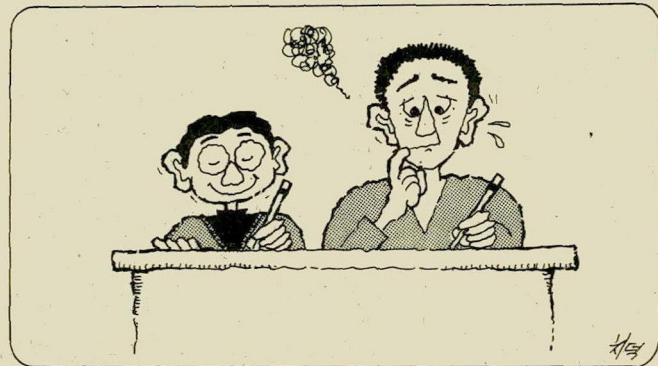
교육부가 올해 업무추진계획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 가운데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 월반제 및 속진제 등에 대해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올 업무보고에서 21세기 개방화, 정보화의 무한경쟁시대를 앞두고 교육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올해를 ‘교육개혁의 해’로 설정하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교육혁신에 모든 교육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추진계획 자체가 전반적으로 구체성을 결여한 데다 구체적인 연구·검토도 거치지 않은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계 안팎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우수교원 확보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가 교사와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영재교육 강화방안으로 제시된 월반제와 속진제는 학부모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에 대해 교육부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마련된 것은 아니며 올해 안에 이 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제도가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채찍



과 당근’ 중 채찍쪽 제도임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또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새로 임용되는 교사부터 적용할 것

이며 “교사신분을 위협하는 차원이 아닌 ‘공부하는 교사’를 제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김숙희 장관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 제도가 그러지 않아도 줄고 있는 사대와 교대 지원자를 더욱 줄어들게 할 뿐 아니라 교사정년제 위배, 교사 연수여건의 미비, 과거 대학교수 재임용제에서와 같은 폐해 재발 우려 등을 들어 즉각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전교조도 반박성명을 발표해 “이 제도는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교원통제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교단내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교조는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는 지난 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교원통제의 목적에서 수립됐던 ‘교원종합대책안’에 포함돼 있던 방안으로, 지난해의 우수교원 확보대책에 들어 있었으나 전교조와 일선 교사들의 비판이 거세자 슬그머니 후퇴했던 제도”라면서 “우수교원 확보는 교원 근무여건과 교육환경의 개선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교원정원 확대와 학급 증설을 통한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

급당 학생수의 적정화, 다양한 연수와 재교육과정을 통한 교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함양 등이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근본적 방안이라는 것이다.

월반제와 속진제는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영재교육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우리 현실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지난 3일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교육환경과 풍토 등 월반제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학부모회는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차별적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월반제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입시위주 풍토 속에서 월반제가 실시될 경우 학업능력의 조기 계발보다는 월반자의 숫자로 학교의 우열을 가리려드는 풍토와 성적위주 교육, 과외열풍 등이 심화할 수 있고 월반자 관별기준의 객관성 확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부모회는 영재교육을 위해서는 학년만 올리는 형식적인 월반제가 아니라 과학고와 같은 과학중학교 등 신뢰할 만한 교육기관을 신설하는 등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영선 기자